과거사 감추려는 일본의 '역사세탁'에 분노

日,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광주 시민 반응

"미흡한 강제노역 시인, 외교 승리라 할 수 있나" 독일 간 시민모임 "국제적 승인 치욕스럽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5일(현지 시간) 조선인 강제 징용시설을 비롯, 일 본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시설 등 23곳을 세계유산으로 결정하면서 지역 시민단체 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 고 있다.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 스(SNS)에서는 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과거사를 감추려는 일본

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의견을 전달 하기 위해 독일을 찾았던 '근로정신대 할 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성명을 내고 "침략전쟁의 어두운 역사 시설 등을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이 되게 국제무대에 서 승인해 준 것은 치욕"이라며 "아베 정 권의 역사세탁 시도를 완성해준 것"이라 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5만8000명의 조선인이 강 제노역을 한 시설이 인류가 지켜야할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는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강제노역을 처음 언급했다는 이유로 '외교적 승리'라며 호 들갑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호소 해온 시민모임은 지난 2일(현지 시각)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독일 로 날아가 200여명의 교민과 함께 일본 시 설의 등재를 반대해왔다.

인터넷과 SNS에서도 정부 외교력의 문 제점과 왜곡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난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페이스북 사용자 남경민 씨는 "외교력 을 총 동원해서라도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를 막아야 했다"면서 "우리 외교단의 실 패"라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 ' $na \times \times \times$ ' 사 용자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와 그들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아직도 그때의 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들이 계신다"고 적고 "아직도 제대로 된 독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정말 화 가 난다"고 세계유산 등재 사실을 비판했

한편,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에 추 진한 23개 장소에는 한반도 침략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사설학원인 '쇼 카손주쿠(松下村塾)'와 군함도(하시마) 탄 광 등 강제 징용시설 7곳도 포함됐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평화맨션 재건축 쉽게 해주오"

북구, 용적률 완화 골자 조례 개정 건의안 광주시에 제출

장마철 시설물 점검

광주시 북구는 균열사고 발생 1년

이 지난 평화맨션 재건축(광주일보 2

일자 6면〉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을 광주시

북구는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되 면 해당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용적률

이 완화돼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이어

지게 돼 거주민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

건의안은 지난 2003년 7월 1일 용적

률 최대 한도인 300% 이하로 건축된 소

규모 공동주택 중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우려로 재건축이 시급한 공동주택

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건립하는 게

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6일 북구 동림동 우석지하치 도 배수펌프장에서 장마철을 맞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평화맨션(172세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한선의

경우 220%(25평형 기준) 이내지만 북 구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용적

률 상한선이 250%까지 완화돼 재건

축을 통해 25세대 가량 추가 건설이

북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 건의안은

평화맨션 재건축 사업의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건축을 통

한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

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제한, 적

용하도록 해 공공 개발 취지도 감안했 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가능하게 된다.

훈훈한 U대회…네팔 선수단에 유니폼 전달

지난 4월 네팔 대지진 참사로 폐허로 변한 조국에 희망을 선사하러 왔지만 체류비는 물론 선수단 유니폼조차 마련하 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네팔 선수단 소식을 접한 임승진 네팔 서포터즈 단장(광주시산악연맹회장) 등이 6일 오후 광주U대회 선수촌에서 네팔 선수단(42명)에게 유니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수복 등 유니폼은 (사)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인정)과 (주)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후원

'중국 연수 사망' 故 김철균 서기관 내일 광주시청葬

어제 광주로 운구

으로 마련됐다.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광주시청 김철균 서기 관에 대한 영결식이 오는 8일 광주시청 문 화광장에서 광주시청장(葬)으로 치러진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인의 시신이 중국에서 도착, 빈소가 마련된 광 주 북구 그린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장례위원장으 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인은 8 일 오전 10시 시청 문화광장에서 영결식을

치른 뒤 광주시립공원묘지에 안장된다.

광주시는 장례절차와 중국 현지에서의 운구비 등에 1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평생 참 공직자로 살아온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차질없는 장례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김 서기관 등 공무원들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수습 비용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 진 공무원 시신의 운구비용은 공무원 여

비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 록 한다는 방침이 각 지자체에 전달된 이 후 지자체가 반발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행자부가 시신 운구비용과 유족 체재비 등과 관련해 애초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 장했다. 이번 연수를 주관한 행자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 사고수습대책본부 역시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 지안(集安) 버스 추락 사고자 가족당 2명씩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가, 일방적 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 일체를 떠넘겼다는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프리가 부룬디 선수 2명 이틀째 행방 묘연

광주 U대회에 참가한 아프리카 국가 부 룬디 선수단 2명이 선수촌에서 이틀째 보 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주 U대회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 mjna@

조직위가 행방을 찾고 있다. 6일 광주U대회 조직위와 광주경찰청 등 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현재 까지 아프리카 국가 부룬디의 남녀 선수 2 명이 선수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룬디는 이번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선 수 2명과 임원 1명이 입국했으며 각각 태 권도와 육상에 남녀 선수 1명이 출전했다.

조직위 측은 "오는 27일까지 비자가 유 효하다. 선수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설 명했다. /특별취재단=김형호기자 khh@

한전 입찰비리 11명 중형 선고

징역 최고 9년…추징금만 100억원 넘어

법원이 '한국전력 입찰 시스템 조작 비 리' 사건을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훼손한 범죄로 판단, 전산 조작자와 브로 커 등에게 수십억원의 추징금과 중형을 선 고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허술한 공기업 입찰 시스템을 조작, 낙찰가를 흘려주고 호사스런 생활을 했던 알선 브로커와 조직 책 등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6일 한전의 입찰 시스템 허점을 이용, 낙 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등 불법적 방 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산조작책 박모(39)씨에 대해 징 역 9년, 추징금 53억7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공사업자로 알선브로커 인 주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36 억8160만원을 선고했고 한전KDN 파견직 원인 이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추징 금 15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파견업체 직원 정모(35)씨에 대해 징 역 3년, 추징금 2억132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외 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6 건(11명)의 사건 관련자들에게 선고한 추 징금만 100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10여년에 걸쳐 조직적, 반복 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불법으로 낙찰받 은 공사가 피고인별로 수회~100회 이상, 편취한 공사 금액이 모두 1809억원에 이 른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의 전자조달 시 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 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 했다"면서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 가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업계 안팎에서는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 재판부 심리가 진행중인 형사 사건 이 모두 10건(24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번 판결을 선고 예정인 유사 사건과 연관 해 예측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저수지 난간 걸터앉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면?

법원 "안전표지판·난간 갖춘 지자체 책임 없다"

저수지 난간에 이용객이 걸터앉았다 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난 경우 안 전 표지판과 추락 사고 방지 난간 등 통 상 갖춰야 할 안전 장치를 갖췄다면 설 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관리기관인 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7단독 김봉원 판사는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A 씨 유족들이 "추락방지시설 등에 제대 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책 임을 져야 한다"며 광주시 남구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과 추락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난간이 저수지에 설치돼 있었 던 점을 고려하면 통상 갖춰야할 안전장 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가 난간에 걸터앉았다가 취기로 중심을 잃 고 넘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저수지 산책로 진·출입로에 설치된 경고 표지판과 사고 발생 지점에 0.5m 높이로 설치된 나무 난간 등의 경우 자치단체가 추락 방지를 위해 통상 갖춰 야할 안전 시설로 보고 설치·보존상 하자 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광주시 남구 압촌저수지 산책로 난간에 걸터앉았다 가 저수지에 빠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 겨졌으나 치료 중 숨지자 유족들은 자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다도 과속 단속…여수 낚싯배 첫 과태료 부과



○…여수해경이 해 안에서 과속운항을 한 낚시어선에 대해 처음

으로 과태료를 부과.

○…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 면 낚시어선인 A호는 지난 3일 오후 4시 15분께 여수시 거북선대교에서 돌산대 교 방향으로 11.31노트(1knot·1852m)

의 과속으로 운항하다 적발.

○···A호는 지난달 29일에도 이 구간 에서 과속운항을 하다 계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경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개항질서법의 시행령 중 1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A호에 15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여수=김창화기자 chkim@

